

행정안전부, 도로·건물 중심 주소체계를 사물·공간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2020. 9. 2.

행정안전부는 고밀도 입체도시 등장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도시에서 정확한 위치소통을 위해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차원 평면 개념으로 구축된 현재의 도로명 주소를 3차원 입체주소로 전환하고,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를 지하·시설물·공간 등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역(지하공간)을 비롯하여 충북 진천군 줄음쉼터(시설물)와 경기 수원시 공원(공간)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주소체계가 3차원으로 고도화되면 도로 위 건물, 대규모 지하 개발 등에 부여하는 3차원 주소(입체주소), 도로 위에 일시적으로 허가된 푸드트럭 등에 부여하는 주소(시간주소), 보조·주차장·장애인 출입구에 부여하는 주소(대체주소) 등 새로운 개념의 주소를 도입할 수 있다. 또 사람과 단말기 간 위치소통 수단인 '주소'를 기반에 둔 인공지능, 음성인식, 빅데이터, 디지털트윈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020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회'를 개최하면서 드론 배송, 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등 주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한 혁신성장산업 모형개발의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주소기반 산업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작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스마트시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주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소체계 고도화 대상 확대(건물주소 → 건물·사물·공간주소로 확대)

- 건물주소: 현행 도로명주소로 2014년 전면 시행
- 사물주소: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 시설물에 주소 부여
- 2018년 진천군 시범 35종 선정, 2019~2020년 줄음쉼터 등 5종 부여
- 공간주소: 건물 사물이 없는 공터에 주소 부여
- 2018년 수원 시범, 2019년 양평 등 3개 검증, 2020년 광명·정읍 자료정비